

「 2019년 1월 19일 시행 」

제25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번호	
성명	

문제 책형
B

【인문사회계열 : 선택과목】

선택유형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선택과목 표기 (○)
1	행정학	민법총칙	
2	행정학	형사소송법	
3	행정학	경제학	
4	행정학	소방학개론	
5	민법총칙	형사소송법	
6	민법총칙	경제학	
7	민법총칙	소방학개론	
8	형사소송법	경제학	
9	형사소송법	소방학개론	
10	경제학	소방학개론	

※ 주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선택하신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가 시험지의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 및 답안지의 선택과목 (1), 선택과목 (2)와 동일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답안지는 원서접수 시 선택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중앙소방학교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 행정학 】

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 ② 계층적 조직의 능률성을 강조한다.
- ③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처방성을 강조한다.
- ④ 왈도(Waldo), 마리니(Marini) 등이 주도하였다.
- ⑤ 논리실증주의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2. 롤스(J. Rawls)가 제시한 정의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롤스는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정의의 원리를 도출한다.
- ② 전제조건으로서 원초상태란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에 가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 ③ 제1의 원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 ④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이다.

3.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래비용 이론에 따르면 시장의 자발적인 교환 행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관료제의 조정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거래를 외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②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주인의 역선택으로 인하여 대리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 ③ 상황론적 조직이론에서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최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없다고 전제한다.
- ④ 자원의존 이론에 따르면 조직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주도적·능동적으로 환경에 대처한다.
- ⑤ 조직군생태론에 따르면 조직은 외부 환경의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피동적인 존재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닌 것은?

- ① 재산임대수입
- ② 재산매각수입
- ③ 수수료수입
- ④ 사용료수입
- ⑤ 사업수입

5.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행정의 역할은 봉사(service)에 있다.
 ㄴ. 고객(customer) 중심의 행정을 강조한다.
 ㄷ. 단순한 생산성보다 공익의 발견을 중시한다.
 ㄹ. 방향잡기(steering)가 정부의 주된 역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 앨리슨(G. T. Allison)의 정책결정 모형에 포함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ㄱ. 합리모형 ㄴ. 점증모형
 ㄷ. 조직과정모형 ㄹ. 관료정치모형
 ㅁ. 쓰레기통모형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7.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설치한 일선 집행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출입국관리, 노동조건 등 국가적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격과 자치권을 가진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현장의 정보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고 책임 확보도 어렵다는 책임행정의 결여 문제가 있다.

8. 균형성과표(BSC)에서 고객 관점의 성과지표가 아닌 것은?

- ① 고객 만족도
- ② 민원인의 불만율
- ③ 정책 순응도
- ④ 의사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
- ⑤ 신규 고객의 증감률

9. 정책결정의 점증모형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한번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불안정한 상황이나 급속한 개발단계에서 짧은 시간에 큰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책결정자의 의사결정만을 미시적으로 강조한다.
- ④ 정책을 축소하거나 종결하기 어렵다.
- ⑤ 새로운 환경을 반영하는 혁신 또는 개혁적 정책결정이 어렵다.

10. 민츠버그(H. Mintzberg)의 조직분류 중 산출물의 표준화를 중시하며 성과관리에 가장 적합한 조직유형은?

- ① 단순구조
- ② 기계적 관료제
- ③ 전문관료제
- ④ 사업부제구조
- ⑤ 임시특별조직

11. 피터스(B. Guy Peters)가 제시한 정부개혁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 ② 시장모형에서 관리의 개혁방안은 절차적 통제이다.
- ③ 참여정부모형에서 정책결정의 개혁방안은 협의·협상이다.
- ④ 유연조직모형(신축적 정부모형)에서 구조의 개혁방안은 가상조직이다.
- ⑤ 저통제정부모형(탈내부규제모형)에서 공익의 기준은 창의성·활동주의이다.

12.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증주의는 최적화 원리를 강조한다.
- ② 점증주의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가능성이 높다.
- ③ 점증주의는 정책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 ④ 합리주의(총체주의)는 공익과 가치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⑤ 합리주의(총체주의)는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13. 인사평정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쇄효과는 한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자의 판단이 다른 요소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한다.
- ② 집중화 경향은 대부분의 피평가자들에게 중간 수준의 점수를 주는 오류를 말한다.
- ③ 엄격화 경향은 초기 업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한다.
-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는 평가 요소와 상관없는 성별이나 학력, 지역, 연령 등에 대한 편견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한다.
- ⑤ 막바지 효과는 최근의 실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말한다.

14. 조직구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권화는 의사결정권이 어느 정도 위임되어 있는가로 측정된다.
- ② 복잡성은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장소적 분화 등 다양한 국면을 가진 복합적 개념이다.
- ③ 전문화는 대표적인 수직적 분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 ④ 장소적 분화는 공간적으로 분리된 업무수행 장소의 수와 인원수 등으로 측정된다.
- ⑤ 공식화는 주로 각종 규정과 매뉴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그룹 규모의 팀을 구성해 개인, 그룹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하면서 학습하는’ 교육방식이다. 2005년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 과정과 신입관리자 과정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현재 주로 관리자 훈련에 사용되고 있다.

- ① 감수성 훈련
- ② 학습 동아리
- ③ 신디케이트
- ④ 사례 연구
- ⑤ 액션 러닝

16.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은 신뢰, 공동체의식, 유대감, 호혜성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 ② 사회적 자본의 특징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 ③ 사회적 자본은 상이한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는 다의적인 개념이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력을 갖는다.
- ⑤ 사회적 자본은 사적재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공공재이다.

17. 예산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적 제도들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한계성의 원칙 - 신입예산
- ② 명확성의 원칙 - 총액배정예산
- ③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긴급명령
- ④ 통일성의 원칙 - 특별회계, 기금
- ⑤ 완전성의 원칙 - 수입대체 경비, 현물출자

18. 사바티어와 마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이 제시한 정책집행의 성공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정책결정의 기술적 타당성
- ② 명확한 법령과 지침
- ③ 능력 있고 몰입도가 높은 집행담당 공무원
- ④ 다수 이해관계집단의 지속적인 지지
- ⑤ 집행기간 동안 정책 우선순위의 탄력적인 변동

19. <보기> 중 철의 삼각(iron triangle) 모형에서 동맹이 형성되는 행위자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대통령 ㉡. 정당 ㉢. 이익집단
 ㉣. 행정관료 ㉤. 국회의원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20.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예산집행 시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 ② 지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 ③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 ④ 기획지향적이기보다는 통제지향적이다.
- ⑤ 공무원의 회계책임이 확실하다.

21. 조직구조를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로 나눌 경우, 유기적 구조가 적합한 상황적 조건이 아닌 것은?

- ① 권위의 정당성 확보 용이
- ② 모호한 조직목표와 과제
- ③ 성과 측정이 어려움
- ④ 복합적 동기 부여
- ⑤ 복합적 과제

22.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친절·공정의 의무
- ② 청렴의 의무
- ③ 종교중립의 의무
- ④ 복종의 의무
- ⑤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23.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간의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이다.
- ② 조직 간에 형성될 수 있고, 조직 내의 집단 간에도 형성될 수 있다.
- ③ 상호 독립적인 조직들이 상대방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수직적·수평적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 ④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⑤ 조직의 경계가 확실하고 정체성이 강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가 형성된다.

24. 정책지지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정책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리하다.
- ② 정책상위체제라는 분석 단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 ③ 외부안정적 요인에는 정책문제의 특성, 자원의 배분, 법적 구조 등이 있다.
- ④ 외부역동적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통치집단의 변화 등이 있다.
- ⑤ 규범핵심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존재론적 공리를 의미한다.

25. 오스본과 게블러(Osborne & Gaebler)가 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한 '기업가적 정부 운영의 10대 원리'가 아닌 것은?

- ① 수입 확보 위주의 정부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출 통제의 개념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해야 한다.
- ③ 사후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④ 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해 행정서비스 공급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 ⑤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를 서비스 공급 주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법총칙 】

1. 「민법」상 주소(住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② 동시에 여러 곳에서 생활할 수 없으므로 주소는 한 곳만 허용된다.
- ③ 거래행위를 위하여 주소 이외의 장소를 거주소(假住所)로 정할 수 있다.
- ④ 어떤 자에 대하여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居所(居所)를 주소로 본다.
- ⑤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계약해지
- ② 채무면제
- ③ 유언자의 유언
- ④ 상계의 의사표시
- ⑤ 취소의 의사표시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다.
- ④ 미성년자는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 ②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효력이 없다.
- ③ 변경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그 변경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 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하여야 한다.

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 ③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 ④ 이사의 대표권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 ⑤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6.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자가 유언을 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②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출연한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8.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의 동의가 없으면 부담 없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 ② 乙이 甲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甲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 ③ 甲이 속임수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乙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9.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④ 태아가 출생하기 전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10. 다음 권리 중에서 형성권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ㄱ. 추인권	ㄴ. 상계권
ㄷ. 계약해제권	ㄹ. 채권자취소권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 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1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공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 ② 본인의 사망은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이다.
- ③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14. A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내심으로는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하는 X부동산을 B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B가 A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거나 주의를 기울여 더라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A는 X부동산을 B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B가 A의 진의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A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③ A와 B가 통정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④ A와 B가 통정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에 따라 A가 X부동산을 B에게 양도하였다면, A는 B에게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였음을 이유로 X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A와 B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되었고, 이를 알지 못한 C가 B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A는 그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15.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없다.
- ②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 ③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착오를 한 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에는 권리행사를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16. 甲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乙은 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만약 丁이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할 당시 선의이면 丁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7. 임의대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② 통상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 ③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가진다.
- ⑤ 원인된 법률관계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8.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에게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甲이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③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응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1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되기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③ 시효중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진다.
- ④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책임은 중단사유에 속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필요로 한다.
- ⑤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

20. 甲의 대리인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丙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수령할 수 없다.
- ⑤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21. 12월 30일 15시부터 2개월이라고 할 때, 그 기간은 언제 만료하는가? (단, 다음 해 2월의 말일은 28일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① 2월 28일 15시
- ② 2월 28일 24시
- ③ 3월 1일 15시
- ④ 3월 1일 24시
- ⑤ 3월 2일 15시

2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당사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약정할 수 없다.
- ③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
- ②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해야 한다.
- ④ 정당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와 표현대리행위는 같은 종류의 법률행위에 속해야 한다.
- 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대리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③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④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5.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
- ④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한다.
- ⑤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형사소송법 】

1.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할 경우,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 전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불복이 신청된 당해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1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심문을 담당하였다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
- ④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에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 ⑤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규정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준용된다.
- ②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이외의 범죄사실에 미친다.
- ③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서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 ④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⑤ 고소를 함에는 고소능력이 있음을 요하는바, 이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3.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이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 ②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거나 조서작성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로 볼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강제채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 없이 행하는 강제채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영장 없이 이루어진 채혈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해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를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채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강제채혈을 할 수 있다.
- ⑤ 수사기관은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 없이 강제채혈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5.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② 검사는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③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 직무상 위탁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비망록을 뇌물수수 등의 증거자료로 임의로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반드시 그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공소제기 후라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6. 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증인신문은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의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및 동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⑤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즉결심판의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된다.
- ③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 ⑤ 공소제기 시 공소장에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8.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에 속하므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 ⑤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9.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가 제1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 ②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④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동법 제7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
- ⑤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특별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으나, 공소장변경허가에 관한 결정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는 피고인이 모르게 녹음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 ②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범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④ 3자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②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③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 지출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피고인이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

12.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다.
- ②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의해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러한 자백은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③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보, 진술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 형식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를 판단한다.
- ⑤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3.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14.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 ②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⑤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할 필요가 없다.

15. 증거동의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②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버린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를 파악해야 하므로 증거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에 대해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 인정 여부를 다투어도 제1심에서 행한 증거동의를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 ④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 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 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전문진술에 대해 '별 의견이 없다'는 진술에 의해서도 증거동의를 의사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심절차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가 항소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항소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 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다.
- ④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⑤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17.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상습범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구)「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에 동일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 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 ④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한 것을 그 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⑤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에도 미친다.

18.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있다.
- 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있는 때에는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경우 이외에는 결정으로써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 하여야 한다.
- ⑤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주문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9.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②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 ③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 ⑤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도 공판조서는 그 기재된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

20.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은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일 뿐, 상소의 포기로 인하여 소멸한 상소권까지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② 「형사소송법」 제345조와 관련하여, 위법한 공시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이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③ 상소권회복신청의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대리인이란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소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결정정본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소권 행사를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말하는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의미하므로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 ⑤ 피고인의 항소대리권자인 배우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경우에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1.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 ③ 구속기간 연장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의한 구속연장기간은 지방법원 판사의 연장허가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88조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⑤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이 구속한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22.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 ②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③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3. 파기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하급법원뿐만 아니라 파기판결한 상급법원 자신까지도 기속한다.
- ②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인 부정 판단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긍정 판단에 대해서도 생긴다.
- ③ 환송 후 원심에서의 증인이 한 증언 내용이 환송 전까지의 진술내용과 같은 취지로서 그의 종전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고, 환송 후 원심에서 그 외에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배제되지 않는다.
- ④ 파기판결에서 전제로 되었던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법령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속력이 배제된다.
- ⑤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24.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 ③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이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④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증거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⑤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25. 다음 중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庭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庭해버린 경우
- ②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의 경우
- 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최초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경제학 】

1. X재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 균형 상태에서 X재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함수 : $D = 100 - P$
 공급함수 : $S = -50 + 1.5P$
 (D는 수요량, 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 ① $-\frac{1}{3}$ ② $-\frac{2}{3}$ ③ -1
 ④ $-\frac{3}{2}$ 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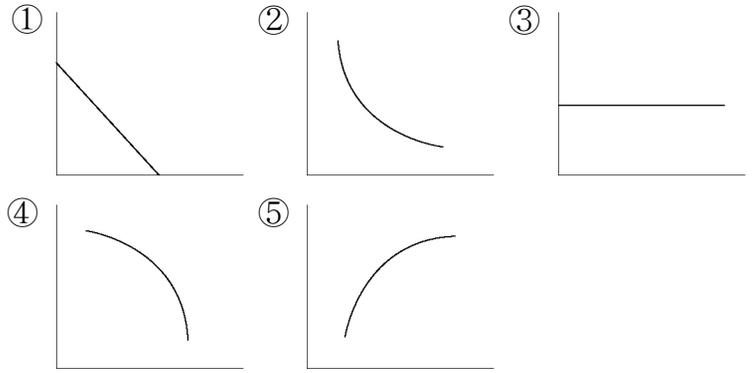
2. A국 정부는 일반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갖는 시장에서 유효한 가격하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가 가격하한선을 더 올리는 경우 예상되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 ① 공급량 증가, 수요량 감소, 공급과잉 증가
 ② 공급량 감소, 수요량 감소, 공급과잉 감소
 ③ 공급량 감소, 수요량 불변, 공급과잉 감소
 ④ 공급량 증가, 수요량 증가, 물량부족 증가
 ⑤ 공급량 불변, 수요량 증가, 물량부족 증가

3. 냉커피에서 커피와 얼음은 서로 보완재이며 정상재라고 가정하자. 얼음 제조에 필요한 전기의 요금이 인상될 때 이에 따른 효과로 알맞은 것은?

- ① 커피 균형 가격의 상승
 ② 얼음의 균형 공급량 증가
 ③ 커피의 균형 공급량 증가
 ④ 얼음의 균형 수요량 증가
 ⑤ 커피의 균형 거래량 감소

4. 소비자 A에게는 초콜릿 음료 한 잔에 쿠키 네 개를 함께 먹는 것과 초콜릿 음료 세 잔에 쿠키 두 개를 함께 먹는 것의 효용이 같다. 만약 초콜릿 음료 두 잔에 쿠키 세 개를 함께 먹는 것의 효용이 더 높다면 A의 무차별곡선 형태로 적합한 것은? (단,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5. 아래의 표는 각 소비자 A, B, C, D가 김밥 한 줄에 대하여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각 생산자 갑, 을, 병, 정이 김밥 한 줄에 대하여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각 소비자와 생산자는 김밥 한 줄만을 소비하거나 생산할 수 있다.)

소비자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생산자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
A	6,000원	갑	1,000원
B	3,000원	을	3,000원
C	2,000원	병	5,000원
D	4,000원	정	2,000원

- ① 균형 가격은 2,000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김밥 세 줄이다.
 ②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잉여는 총 3,000원이다.
 ③ 균형 상태에서 생산자잉여는 총 2,000원이다.
 ④ 균형 상태에서 김밥 소비자는 B, C, D이다.
 ⑤ 균형 상태에서 김밥 생산자는 갑, 을, 정이다.

6. 두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 = 2\sqrt{XY}$ 이다. X재와 Y재의 시장 가격이 각각 25만원과 50만원이고 A의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주어진 예산제약하에서 A가 선택하는 최적소비량의 조합은?

- ① $X = 0, Y = 20$
- ② $X = 10, Y = 15$
- ③ $X = 15, Y = 12$
- ④ $X = 20, Y = 10$
- ⑤ $X = 40, Y = 0$

7. 단기생산함수가 $Q = 200L - L^2$ 인 어떤 완전경쟁기업이 현재의 생산수준에서 노동(L) 55단위를 고용하고 있다. 이때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생산물 가격은 5이다. 현재 상황에서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노동의 단위당 임금은 얼마인가?

- ① 75 ② 125 ③ 300
- ④ 450 ⑤ 550

8. 다음 생산함수 중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단, L과 K는 생산요소의 투입량, Q는 생산량을 나타낸다.)

- ① $Q = \min(L, K)$ ② $Q = \frac{1}{2}\sqrt{KL}$
- ③ $Q = 3L + 2K^{\frac{1}{2}}$ ④ $Q = L^a K^{1-a}$
- ⑤ $Q = K^{\frac{1}{3}} L^{\frac{2}{3}}$

9. 어느 완전경쟁기업의 비용함수가 $C = 5Q^2 + 275$ 이고, 이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시장에서 700원에 거래된다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생산량(Q)은?

- ① 60 ② 65 ③ 70
- ④ 75 ⑤ 80

10. 어느 독점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시장 A와 시장 B에 공급하고 있다. 두 시장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 가격차별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시장 A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4이고, 시장 B에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라고 한다. 이때 이 독점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시장 A와 시장 B에 부과하는 가격의 비율 $\frac{P_1}{P_2}$ 은?

- ① $\frac{1}{2}$ ② $\frac{2}{3}$ ③ 1
- ④ $\frac{3}{2}$ ⑤ 2

11. 어떤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4\sqrt{LK}$ 이다. 노동(L)은 단위당 1원, 자본(K)은 단위당 4원이라고 한다면, 생산량 10단위를 만들기 위한 최소비용은?

- ① 10원 ② 12원 ③ 14원
- ④ 16원 ⑤ 18원

12. ○○군청은 지역 주민을 위해 가로등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의 민원을 수용해 가로등을 5개 설치한다면 최적 수준에 비해 몇 개가 더 많은가?

설치개수	1	2	3	4	5
설치비용	100	200	300	400	500
주민편익	140	270	380	460	500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④ 4개 ⑤ 5개

13. 순수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서비스는 대표적인 순수공공재에 해당한다.
- ② 시장수요곡선은 개별수요곡선의 수평의 합으로 구해진다.
- ③ 공동소비가 가능한 비경합적인 특성 때문에 소비를 위한 경쟁이 필요 없다.
- ④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어 민간기업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⑤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소비를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14. 파레토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전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하는 독점시장에서는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없다.
 - ② 재화 간 소비자들의 주관적 교환비율이 서로 같아야 한다.
 - ③ 생산요소의 관점에서는 한계기술대체율이 서로 같아야 한다.
 - ④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고, 시장실패가 없는 경우 일반경쟁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 ⑤ 생산가능곡선은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를 나타낸다.

15. 우리나라의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이 아닌 것은?
- ①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제품을 구입한다.
 - ② 서울시가 시청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한다.
 - ③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한다.
 - ④ A기업이 국내의 ○○시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 ⑤ 정부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6.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다음 정책 중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가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 ① 재할인율을 0.5%p 인하하였다.
 - ② 법정지급준비율을 0.5%p 낮추었다.
 - ③ 5,000억 원의 국채를 시중은행으로부터 구입하였다.
 - ④ 시중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5,000억 원 증액하였다.
 - ⑤ 5,000억 원의 통화안정증권을 시중은행에 매각하였다.

17. 중앙은행이 내년도 통화량을 화폐수량설에 기초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2%,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2.5%, 화폐유통 속도의 증가율은 -0.5%로 각각 예상할 때, 예상되는 통화량 증가율은?
- ① 1% ② 1.25% ③ 4%
 - ④ 5% ⑤ 10%

18. 사과와 배만으로 구성된 경제를 가정하자. 2010년에 사과와 배의 가격은 각각 1,000원과 4,000원이었고, 2018년에 사과와 배의 가격은 각각 2,000원과 3,500원이었다. 2010년에 평균적인 소비자가 구입한 사과와 배의 수량은 각각 10개와 5개였고, 2018년에는 각각 5개와 10개였다.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하는 2018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 ① 75 ② 100 ③ 125
- ④ 150 ⑤ 450

19. 빈칸 ㄱ, ㄴ에 들어갈 숫자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A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50만 명이고, 그중 145만 명이 취업자, 5만 명이 실업자라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은 (ㄱ)%이다.
- B국의 실업률이 10%이고 취업자 수가 225만 명이라면, 경제활동인구는 (ㄴ)만 명이다.

- | | ㄱ | ㄴ |
|---|----|-------|
| ① | 58 | 247.5 |
| ② | 58 | 250 |
| ③ | 60 | 235 |
| ④ | 60 | 247.5 |
| ⑤ | 60 | 250 |

20. 구매력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인플레이션율과 외국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환율변화율과 일치한다.
 - ② 환율이 각국 화폐의 구매력, 즉 물가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 ③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교역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 ④ 두 화폐의 구매력이 동등하다면 이를 교환하는 것은 교환자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 ⑤ 환율이 균형환율에서 괴리되면 해외재화의 수입이나 국내재화의 수출에 의해 거래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21. 총생산량이 고정된 고전학과 모형에서 실질이자율의 하락을 초래하는 정책은?

- ① 정부구매의 증가
- ② 소비의 증가
- ③ 조세의 증가
- ④ 저축의 감소
- ⑤ 가처분소득의 증가

22. 다음의 케인즈 국민소득 모형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지출을 현 수준에서 30% 증가시킨다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단, 해외 부문은 균형 상태이며, 구축효과는 없다.)

$$Y = C + I + G + EX - IM$$

$$C = 100 + 0.8Y_d, I = 300, G = 100, T = 100 + 0.5Y$$

(Y : 국민소득, C : 소비, I : 투자, G : 정부지출, EX : 수출, IM : 수입, Y_d : 가처분소득, T : 세금)

- ① 50
- ② 100
- ③ 150
- ④ 200
- ⑤ 250

23.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 ㄴ.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 ㄷ.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최저임금 상승
 - ㄹ. 연구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인공지능 기술 발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4.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여긴다면, 그 결과로서 옳은 것은?

- ① 미국의 균형이자율은 하락하고 달러환율은 평가절상된다.
- ② 미국의 균형이자율은 하락하고 달러환율은 평가절하된다.
- ③ 미국의 균형이자율은 상승하고 달러환율은 평가절상된다.
- ④ 미국의 균형이자율은 상승하고 달러환율은 평가절하된다.
- ⑤ 미국의 순자본유출은 감소하고 달러환율은 평가절하된다.

25. 솔로우 성장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 ② 총생산함수는 투입요소인 총자본과 총노동에 대해 규모수익체증과 한계수확체감의 성질을 가진다.
- ③ 단기적으로는 생산요소 간의 기술적 대체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 ④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모두 장기적으로 동일한 소득수준에 수렴한다.
- ⑤ 절대적 수렴가설은 경제의 기본 구조가 서로 다른 나라들 사이에 소득수준의 수렴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소방학개론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용소방대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 ③ 소방시설 점검업무의 보조
- ④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 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2.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자동차 구입
-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설치
- ④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구입
- ⑤ 소방관서용 청사의 대수선

3.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옥내소화전설비
- ② 옥외소화전설비
- ③ 물 분무 소화설비
- ④ 스프링클러설비
- ⑤ 포소화설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이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 m²인 판매시설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m²인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 m²인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7,000 m²인 의료시설 중 종합 병원
-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0 m²인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재난상황정보	ㄴ. 동원가능 자원정보
ㄷ. 시설물정보	ㄹ. 지리정보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특정관리대상 지역에 대한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등급 A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② 안전등급 B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③ 안전등급 C등급: 반기별 2회 이상
- ④ 안전등급 D등급: 월 1회 이상
- ⑤ 안전등급 E등급: 월 2회 이상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고용노동부
- ②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 국토교통부
- ③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행정안전부
- ④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 산업통상자원부
- 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 소방청

8. 표준 상태에서 공기 중 가연물의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나열된 것은?

가연물	ㄱ	ㄴ	ㄷ	ㄹ
연소범위 (%)	4~16	3~33	1~14	6~36

- ① ㄴ > ㄹ > ㄱ > ㄷ
- ② ㄴ > ㄹ > ㄷ > ㄱ
- ③ ㄷ > ㄴ > ㄱ > ㄹ
- ④ ㄷ > ㄴ > ㄹ > ㄱ
- ⑤ ㄹ > ㄴ > ㄱ > ㄷ

9.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소는 빛과 열의 발생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 ②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이다.
- ③ 수소 기체는 아세틸렌 기체보다 연소범위가 더 넓다.
- ④ 가연물의 인화점이 낮을수록 연소 위험성이 커진다.
- ⑤ 열분해에 의해 산소를 발생하면서 연소하는 현상은 자기연소이다.

10. 건축물 내부화재 시 발생하는 열과 연기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광계수가 증가할수록 가시거리는 증가한다.
- ② 연기의 수직방향 유동속도는 수평방향보다 빠르다.
- ③ 굴뚝효과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 ④ 화재실 내부에서 중성대의 상부 압력은 실외 압력보다 높게 나타난다.
- ⑤ 열의 전달 방법 중 복사는 중간 매개체 도움 없이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에너지의 전달이다.

11. 자연발화 방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의 유통을 방지한다.
- ② 황린은 물속에 저장한다.
- ③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 ④ 열의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
- ⑤ 발열반응에 정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을 피하여야 한다.

12.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전도율이 높을 것
- ② 활성화에너지가 작을 것
- ③ 산화가 잘되며 발열량이 높을 것
- ④ 연쇄반응이 일어나기 쉬운 물질일 것
- ⑤ 산소와 친화력이 높으며 표면적이 넓을 것

13. 가연물의 종류에 따른 화재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화재는 보통화재라고도 하며, 화재 발생 시 주로 백색 연기가 생성되며 연소 후에는 재를 남긴다.
- ② 유류화재는 화재 시 일반화재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주로 흑색 연기가 생성되며 연소 후에는 재를 남기지 않는다.
- ③ 전기화재는 C급 화재로서 통전 중인 전기시설물로부터 유도되며, 원인으로는 합선(단락), 과부하, 누전, 낙뢰 등이다.
- ④ 금속화재는 D급 화재로서 금속작업 시 열의 축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건조사, 건조분말 등을 이용한 질식·피복 효과와 물을 이용한 냉각효과를 이용해 소화한다.
- ⑤ 가스화재는 가스가 누설되어 공기와 일정 비율로 혼합된 상태에서 점화원에 의하여 착화되어 발생하며, 주된 소화방법은 밸브류 등을 잠그거나 차단시킴으로 인한 제거소화법이다.

14. 응상폭발에 해당되는 것은?

- ① 저온의 액화가스가 상온의 물 위에 분출되었을 때와 같이 액상에서 기상으로의 급격한 상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현상
- ② 공기 중에 분출된 가연성 액체의 미세한 액적이 무상으로 되어 공기 중에 있을 때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현상
- ③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에 착화원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현상
- ④ 공기나 산소가 섞이지 않더라도 가연성 가스 자체의 분해 반응열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현상
- ⑤ 대기 중에 기화하기 쉬운 가연성 액체가 유출되어 가연성 혼합기체가 대량으로 형성되었을 때 점화원에 의해 착화되어 일어나는 폭발현상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 및 지정수량이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유별	품명	지정수량
①	제1류	과망간산염류	300 kg
②	제2류	마그네슘	100 kg
③	제3류	과염소산	300 kg
④	제4류	알코올류	200 kg
⑤	제5류	유기과산화물	10 kg

1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있는 대로 고르면?

ㄱ. 알킬알루미늄	ㄴ. 마그네슘
ㄷ. 히드록실아민	ㄹ. 중크롬산
ㅁ. 알킬리튬	ㅂ. 적린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ㄴ, ㅂ

17.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내용이다. (ㄱ), (ㄴ)에 알맞은 것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할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할 날부터 (ㄱ)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선임한 날부터 (ㄴ)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ㄱ	ㄴ
①	7	14
②	14	7
③	30	7
④	30	14
⑤	30	30

18.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이다. (ㄱ)~(ㄷ)에 알맞은 것은?

제2석유류는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ㄱ)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ㄴ)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ㄷ)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ㄱ	ㄴ	ㄷ
①	18	10	40
②	20	20	45
③	20	25	50
④	21	30	55
⑤	21	40	60

19.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화재의 연소경로 등 연소상황 조사
- ②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피난상황 조사
- ③ 화재의 발견,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 ④ 열에 의한 탄화, 파손 등의 재산피해 조사
- ⑤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조사

2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식: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
- ② 재구입비: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 포함)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
- ③ 내용연수: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
- ④ 손해율: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
- ⑤ 잔가율: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21.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화방법은?

비중이 물보다 큰 중유 등 비수용성 유류화재 시 무상주수하거나 포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유류 표면에 얇은 층이 형성되어 공기 중의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소화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① 제거소화법 ② 유화소화법
- ③ 억제소화법 ④ 방진소화법
- ⑤ 피복소화법

22.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제살수식의 경우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다.
- ② 건식의 경우 2차측 배관에 가압수를 충전시킨다.
- ③ 습식과 일제살수식의 경우 감지기가 설치된다.
- ④ 습식의 경우 슈퍼비조리판넬(Supervisory Panel)이 설치된다.
- ⑤ 준비작동식의 경우 감지기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다.

23. 차동식스포츠형과 정온식스포츠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둘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는?

- ① 다신호식
- ② 아날로그식
- ③ 광전식스포츠형
- ④ 보상식스포츠형
- ⑤ 이온화식스포츠형

2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피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 ③ 각 거실에서 옥외로 이르는 피난경로
- ④ 피난 시 소화설비의 작동과 사용계획
-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2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구조 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 ②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감기환자
- ③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 ④ 술에 취했으나 외상이 없고 강한 자극에 의식을 회복한 사람
- ⑤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